

교육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4대 쟁점 토론 (토론자 : 임경환)

* 토론자 소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야학, 이주노동자교육, 홈스쿨링 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공교육 교사, 대학 교육학 강사)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교육부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사업이 계기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사회 단체에 민간위탁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다보니 마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과는 또 다른 ‘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 순천형 교육자치 거버넌스



* 각 쟁점들에 대한 의견과 대안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입장에서)

[쟁점 1] : 관-관 거버넌스

- 각 기관의 독립성은 유지한 채 매월 1회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안건을 가지고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 실무협의회 자리에 하나의 기관으로 순천시풀뿌리교육 자치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음. 민간인인 중간지원조직이 계속해서 장을 만들고 있음.

-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새로운 교육 도시, 순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음. 새로운 교육도시 대토론회를 세 기관이 함께 준비하고 있음.
- 순천 지역 내부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부분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각 기관장에 의해 실무협의회 결과가 뒤집혀 본 적은 없지만, 민감한 사안일 경우 협의사항이 결재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음.
-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몇몇 분들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특유의 분위기는 계속 남아 있음.
- 순천시에는 6년 동안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중간지원조직과 많은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의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혁신팀이 생기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고민할 수 있는 장학사들이 교육지원청에 생겨남.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 업무가 여러 업무 중 하나여서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힘든 상황.
-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좀더 거버넌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직의 입장에서 있기 보다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조직 내 민주적인 문화가 서행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같은 공간 안에서 통합된 조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방향이 교육 자치 거버넌스를 위해서 필요해 보임.

[쟁점 2] 민·관 거버넌스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대체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관 거버넌스라고 보여짐. 대부분 센터는 지자체에 속해 있고, 민간 전문가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까?
- 민·관 거버넌스 조직에 학부모와 마을교사가 관과 같은 인원수로 참여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로 만나고 있으며 관은 민을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는가가 민·관 거버넌스의 판단 기준이 아닐까?
- 현재 순천의 경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민관학거버넌스 조직인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고 있다.
- 최근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9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교사, 교육지원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사람들과 함께 논의했다. 조만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 예정인데, 그 행사 준비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 민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참여위원회 만들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도민들이 교육 정책 수립 방향, 도민 참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교육경비 사업, 지자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위원회와 22개 시·군 별 지역위원회 등 모두 23개 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공무원, 도민 등 30명 안팎 씩 모두 68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구자인 박사님이 제안하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지역 내에 아직 그럴만한 조직이 없기에 아쉬울 뿐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런 역량 있는 민간인들이 모인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민간인들의 역량이 모여진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쟁점 3] 민-민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

- 순천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마을교육공동체 영역에서는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마을교육활동을 했던 분들,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서운해 하는 지점이 있음. 그동안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갑자기 마을교육공동체 쪽으로 지원이 몰리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함.
- 마을교육공동체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함.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
- 또 하나는 교사를 민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교사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입장 차이가 많음.
-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으로 사람들을 모아 낼 필요가 있음.
- 읍·면·동 단위로 지역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총회 같은 단위가 필요함.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교육자치회가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 누구나 교육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그동안 지역교육과 돌봄을 책임져 왔던 주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
- 순천에는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음. 매월 1회 모여서 정담회라는 자리를 가짐.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에서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마을의 리더들은 끊임없는 의사소통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함.

교육자치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 공무원들도 그 일이 가슴 뛰는 일이 되도록.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활동의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지자체에서 초대할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보았지만, 이미 마련된 밥상에 몇 마디 말을 던지고 나올 때 느껴지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간의 진실함과 열정으로 공무원을 감동시켜야 한다. 같이 일하는 한 공무원이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일하는 동안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 일을 하는 것이 재밌다. 가슴이 뛰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업무이자 하나의 자신의 비전이 된 것이다. 그것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움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2. 계속 만나야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한다. 사람들은 꽤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서 밥먹고 이야기 나누고 정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믿는다. 그것이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너무 낭만적이지만.

3. 공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일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이어야 거버넌스가 가능해 질 것 같다.

4. 성과는 관의 것.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민’.

* 거버넌스 관련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Kooiman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Kooiman은 거버넌스를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거버넌스는 누군가가 시켜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원해야 가능해집니다. 굳이 상대방이 필요가 없는데, 거버넌스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 같이 해 보자”라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진짜 거버넌스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